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지침 순차적 공개

정부, 생활방역 전환 수순... 22일 개인·집단 기본 수칙 초안 공개

유형별 시설 지침도 24일 검토 배포 "5월 임시국회서 과태료 입법 추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일상 생활에서의 지침을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게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국민들이 학습하고 일상 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미리 공개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내일(22일) 오전 11시에는 개인과 집단지침의 기본 수칙 초안을 공개한다"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지침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의

거쳐 금요일(24일) 같은 시각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강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후부터는 생활 방역 전환 수순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지침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가장 빠르게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때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 대해 부과할지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현재 일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되고 있긴 하지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사법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라 더 빠르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침을 잘 지킨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 반장은 "인센티브 등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이를 법률 내 담을지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고용상황 매우 엄중 일자리 지키기 총력을"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일자리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3월 전체 취업자 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취약계층 피해가 컸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내수위축과 세계경제 동반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산업과 계층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며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휴직수당 최대 90%까지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표한 재정·금융 지원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라"며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긴급 일자리 마련 등 추가 대책과 업종별 지원 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종부세 강화법, 원안대로"

민주 '12·16 대책 반영 원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총선때 '1주택자 감면·장기거주자 면제' 반영 안돼

김정우 의원 "1주택자 공제 부분 12·16 대책에 취지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국회때 12·16 대책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를 통틀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 포인트씩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

서 말한 내용은 12·16 대책에 많이 반영됐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도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주택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고, 강남3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수도권 출마자들도 지난달 2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총선 당시 언급했던 종부세 완화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종부세 감면을 적극 주장하는 야당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원안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4·19혁명 UN/유네스코 세계역사기록 유산 등재'를 기념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은 4·19혁명UN/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송월주·전병금 상임고문, 장상·김덕홍 이사 등과 함께 4·19혁명 UN/유네스코 세계역사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靑 "정상 활동 중... 측근과 지방 체류"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현재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체

"특이 동향 파악되지 않아"

류하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 "묘향산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 내각, 군부 어디에도 비상 상황과 같은 특이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

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CNN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 언론을 통해 건강이상설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CNN은 미 중앙정보국(CIA),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에 김 위원장의 위독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4월15일·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계기로 신변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빠짐없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다.

북한 매체 데일리NK는 전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